

조회 결과로는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고, 지급은 창구에서 다시 시작된다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금융재산을 찾는 절차

2023년 한 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283,029건이다. 2022년 267,260건보다 15,769건 늘었다.¹ 금융감독원은 2023년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² 1999년 1월부터 2023년까지 누적 이용자는 약 225만 명이다.³

금융감독원은 조회 결과로 계좌가 있는지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한다고 밝혔다. 정확한 잔액은 금융회사를 찾아가야 확인된다.⁴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회사는 고인의 계좌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입금과 출금, 자동이체가 함께 막힐 수 있다.⁵ 유족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 뒤에 금융회사를 다시 찾아가야 한다.

돈을 실제로 받는 절차는 금액에 따라 갈린다. 300만원 이내는 상속인 한 사람의 신청으로 지급한다. 300만원을 넘고 1,000만원 이내면 상속인 3분의 2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⁶ 그사이에도 상속세 신고기한은 흘러간다.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한다.⁷ 연구소는 조회 결과가 지급 절차로 이어지지 않는 구간을 문제로 본다.

발행일	자료 기준일	분량
2026년 8월 18일	2026년 8월 18일	본문 21쪽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NEXUS Finance and Management Institute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며, 거래할 금융회사를 정하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금융재산을 찾는 절차는 어디에서 멈추는가.

무엇을 알아냈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2023년 283,029건이다. 2022년 267,260건보다 15,769건 늘었다.¹ 2023년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² 그런데 조회 결과가 무엇을 담는지는 안내마다 다르다. 금융감독원 안내문은 예금액과 채무액을 통지한다고 적었다. 저축은행중앙회와 한국신용정보원은 계좌가 있는지만 적었다.⁴ 신청 사실이 금융회사에 통보되면 그 계좌의 입금과 출금이 막힐 수 있다.⁵ 결과는 협회마다 따로 오고, 신청일에서 3개월이 지나면 지워진다.⁸ 돈을 받는 절차는 그 뒤에 금융회사별로 새로 시작한다.⁶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한다. 시청과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감독원과 은행, 우체국 창구에서 따로 신청한다. 신청하기 전에 고인 계좌에서 나가는 자동이체를 먼저 확인한다. 조회를 신청하면 그 이체가 멈출 수 있다.

한눈에

조회 결과에는 예금액과 채무액이 함께 온다. 정확한 잔액은 금융회사에 물어야 한다. 돈은 그 창구에서 받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 협회별 처리 기간은 **협회가 밝힌 예상 기간**이다. 실제로 걸린 기간을 잔 통계가 아니다.
- 안심상속과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의 누적 이용자는 **집계를 시작한 해가 서로 다르다**. 두 값을 나란히 놓고 이용률을 건주면 어긋난다.
-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총액에는 **살아 있는 사람의 몫도 들어 있다**. 상속재산만 잔 값이 아니다.
- 금액은 발표 자료에 적힌 자릿수를 그대로 옮겼다. 반올림한 값을 원래 값처럼 쓰지 않았다.
- 발표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를 따른 숫자에는 각주를 달았다. 한 곳에서만 확인한 값은 각주에 그렇게 적었다.
- 연구소가 나눈 값에는 계산식을 각주에 적었다. 어려운 용어는 부록 가에 풀었다.

차례

1장	가족이 떠난 뒤 남은 돈을 찾는 일	4
2장	조회하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지 않는가	5
3장	조회와 지급이 왜 따로 도는가	9
4장	누가 얼마나 겪는가	12
5장	찾아가지 않은 돈은 어디에 있는가	14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16
부록 가	용어 풀이	19
부록 나	자료 출처와 각주	19

가족이 떠난 뒤 남은 돈을 찾는 일

이미 대부분의 유족이 거치는 절차다. 그 절차는 어디까지 데려다주나.

283,029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건수 2023년 한 해 · 금융감독원	225만명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누적 이용자 1999년 1월~2023년 ·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150만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누적 이용자 2015년 6월~2023년 · 행정안전부· 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	--	--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유족은 두 가지를 모른다. 고인이 어디에 돈을 두었는지 모른다. 고인이 어디에 빚을 졌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알아보라고 정부와 금융권이 만든 창구가 둘이다. 하나는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다. 다른 하나는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다.

두 창구를 쓰는 사람은 해마다 늘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은 2023년 283,029건이다. 2022년은 267,260건이었다.¹ 1년 사이 15,769건 늘었다.

2025년 신청은 310,738건이다. 2024년보다 4.8% 많다.⁹ 2025년에 세상을 떠난 사람은 363,389명이다.¹⁰

금융감독원은 2023년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밝혔다.² 세상을 떠난 사람 넷 가운데 셋 이상의 유족이 이 절차를 거쳤다는 뜻이다.

이 절차는 특별한 사람의 일이 아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 넷 가운데 셋 이상의 유족이 이미 거친다.

상속인

법이 정한 순서에 따라
고인의 재산과 빚을
물려받는 사람이다.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이고,
자녀가 없으면 부모가
그다음이다.

이 절차는 두 단계로 나뉘어 있다

절차는 크게 둘이다. 앞 단계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는 일이다. 뒤 단계는 그 돈을 실제로 받는 일이다.

두 단계는 서로 이어져 있지 않다. 앞 단계는 협회와 기관이 취합해 알려 준다. 뒤 단계는 금융회사가 상속인을 확인하고 지급한다.

앞 단계의 결과를 들고 가도 뒤 단계는 처음부터 시작한다. 서류를 다시 내고, 상속인이 몇 명인지 다시 확인받는다.

이 보고서는 그 사이 구간을 본다. 조회가 어디까지 알려 주고 그다음에 무엇이 남는지를 따라간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사망신고를 하러 갈 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함께 신청한다.**
확인하는 곳 ·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의 사망신고 창구.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 2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적어 둔다. 상조상품 가입은 이 번호가 맞아야 확인된다.**
확인하는 곳 · 고인의 통신요금 청구서, 가족의 연락처 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고인의 재산 내역을 유족이 이미 모두 알고 있으면 두 창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다만 빚은 유족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

2장

조회하면 무엇이 나오고 무엇이 나오지 않는가

두 창구가 알려 주는 범위와 걸리는 기간을 확인한다.

조회 결과에 금액이 온다는
안내와 계좌가 있는지만 온다는
안내가 함께 있다.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금융채권은 고인이
금융회사에서 받을 돈이다.
예금과 보험금, 증권이
여기에 든다. 금융채무는
고인이 갚아야 할 돈이다.

3~7일

손해보험협회의 결과통보 예상 기간
2026년 8월 확인 · 금융감독원 안내문

15~20일

여신금융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의
예상 기간
2026년 8월 확인 · 금융감독원 안내문

5회

3개월 동안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횟수
2026년 8월 확인 · 한국신용정보원

두 창구는 알려 주는 범위가 다르다. 안심상속은 금융에 더해 세금과 연금, 토지, 자동차까지 묶어 알려 준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금융만 본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는 한 곳에서 답이 오지 않는다. 열네 곳의 협회와 기관이 나누어 회신한다.¹¹

<표 1> 두 창구는 알려 주는 범위와 신청하는 곳이 다르다

2026년 8월 기준 두 서비스의 운영 방식

항목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하는 곳	시청, 구청, 주민센터 정부24	금융감독원, 은행 (수출입은행·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협·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일부 보험사·증권사 창구
알려 주는 범위	금융, 국세, 지방세, 연금 토지, 자동차, 상조상품	금융회사의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보관금품
금액을 알려 주나	알려 주지 않는다	안내문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한다고 적었다
신청 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1년	안내문에 적혀 있지 않다

주: 안심상속 신청 기한은 행정안전부가 2022년 7월 29일부터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다.

금융감독원 안내문에는 6개월로 적은 문장이 아직 남아 있다.¹²

자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문」과 행정안전부 보도자료를 정리.

결과는 협회마다 따로 온다

금융감독원 안내문은 협회별로 걸리는 기간을 따로 적어 두었다. 가장 짧은 곳은 3일, 가장 긴 곳은 20일이다.¹³

이 값은 협회가 밝힌 예상 기간이다. 실제로 걸린 기간을 쟀 통계가 아니다.

<표 2> 같은 신청인데 결과가 오는 시점이 협회마다 다르다

신청 접수일 기준 결과통보 예상 기간

회신하는 곳	예상 기간
손해보험협회	3~7일
예금보험공사	3~10일
생명보험협회	6~10일
금융투자협회	7~10일
우체국	7~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	7~14일

회신하는 곳	예상 기간
전국은행연합회	10~15일
한국신용정보원	10~15일
신협중앙회	10~15일
새마을금고중앙회	10~15일
산림조합중앙회	10~15일
한국예탁결제원	10~15일
여신금융협회	15~20일
저축은행중앙회	15~20일

주: 안내문에 적힌 열네 곳을 짧은 순서로 다시 늘어놓았다. 협회가 밝힌 예상 기간이고 실제 처리 기간의 평균이 아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자기 안내에서 15~20일이라고 적어 이 표의 값과 다르다.⁸ 조희 대상에서 빠지는 금융회사가 있어 그런 곳은 유족이 직접 물어야 한다.¹³

자료: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문」의 협회별 예상 기간 표.

한국신용정보원이 맡는 몫은 따로 돈다.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장학재단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하고 15일에서 20일이 지나야 결과가 뜬다.⁸

그 결과는 3개월 동안 다섯 번까지 볼 수 있다. 3개월이 지나면 지워진다.⁸ 유족이 그 안에 내려받아 두지 않으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무엇을 알려 주는지가 안내마다 다르다

금융감독원 안내문은 계좌가 있는지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한다고 적었다.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은 금융회사를 방문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⁴

협회별 안내는 이와 다르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자기가 맡은 몫에 대해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보관금품이 있는지만 알려 준다고 밝혔다.⁴

저축은행 몫도 같다. 저축은행 이름과 계좌가 있는지까지만 알려 준다. 잔액은 그 저축은행에 따로 물어야 한다.¹⁴

증권 몫에는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금융투자협회는 접수일에 금융투자회사에 남아 있는 것만 알려 준다.¹⁵ 접수 전에 해지된 계좌는 잡히지 않는다.

카드와 캐피탈 묶은 통지일의 채무금액까지 알려 준다. 단계는 넷이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하면 협회로 넘어간다. 협회가 금융회사에 묻고, 금융회사가
 답한 뒤 신청인에게 간다.¹⁶

<표 3> 카드와 캐피탈 묶은 네 단계를 거친다

여신금융협회가 밝힌 단계별 처리 기간

단계	걸리는 기간
금융감독원 접수에서 협회로 넘어가기	1~2영업일
협회가 카드사와 캐피탈사에 묻기	3~5영업일
금융회사가 협회에 답하기	15영업일
협회와 금융회사가 신청인에게 알리기	6~15영업일

주: 모두 영업일 기준이고 달력일이 아니다. 협회는 네 단계를 더한 값을 전체 기간이라고 밝히지 않았다.¹⁶

자료: 여신금융협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안내.

상조상품에는 조건이 따로 있다. 고인의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가입 사실이 확인된다.¹⁷ 유족이 고인의 옛 번호를 모르면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할 수 있는 범위는 2024년 12월 30일에 넓어졌다. 그전에는 은행에 돈을
 맡겨 둔 업체만 잡혔다. 그날부터 모든 선불식 할부거래 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¹⁸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조회 결과가 뜨면 그날 갈무리하거나 내려받아 둔다.

확인하는 곳 · 한국신용정보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확인 화면. 3개월이
 지나면 지워진다

2 계좌가 있다고 나온 금융회사에 잔액을 따로 물어본다.

확인하는 곳 · 해당 금융회사 고객센터. 조회 결과로는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결과가 늦게 오는 협회를 재촉하지 않아도 된다. 협회마다
 예상 기간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

조회와 지급이 왜 따로 도는가

두 절차를 갈라놓은 것은 무엇인가.

조회를 신청하면 고인의 계좌 거래가 멈춘다. 그런데 조회 결과만으로는 그 돈을 받지 못한다.

금융감독원 안내문은 금융회사가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통상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고 적었다. 입금과 출금,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는 문장이 함께 있다.

300만원 상속인 한 사람의 신청으로 지급하는 한도 2026년 8월 확인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1,000만원 상속인 3분의 2 이상이 신청해야 하는 구간의 상한 2026년 8월 확인 ·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6개월 상속세 신고기한. 사망한 달의 말일이 기산점 2026년 8월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

조회를 신청하면 고인의 계좌 거래가 멈춘다. 금융감독원 안내문에 그 문장이 있다. 금융회사가 조회신청 사실을 통보받으면 통상 임의로 거래정지 조치를 취한다는 내용이다. 입금과 출금, 자동이체가 제한될 수 있다.⁵

같은 안내문은 거래정지 뒤의 예금지급을 원칙적으로 상속인 전원의 청구로 한다고 적었다.⁵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에 한 사람이 돈을 빼 가는 일을 막는 절차다.

문제는 멈춘 다음이다. 조회 결과로는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다. 그러니 유족은 그 계좌에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모른 채로 다음 절차를 시작한다.

지급은 금융회사별로 새로 시작한다

돈을 받으려면 금융회사마다 서류를 낸다. 어디서나 요구하는 서류는 셋이다. 창구에 간 상속인의 실명확인증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고인의 기본증명서다.¹⁹

이 세 가지 서류는 2024년 7월 개선안에서 표준화했다. 금융감독원이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정했다. 같은 발표에서 상속인 한 사람이 찾을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렸다.²⁰

금액이 커지면 요건도 커진다. 300만원을 넘고 1,000만원 이내면 상속인 3분의 2 이상이 신청해야 한다.⁶

<표 4> 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상속인을 모아야 한다

한 금융회사에서 받는 상속예금 기준

금액	누가 신청하나	함께 필요한 것
300만원 이내	상속인 한 사람	다른 상속인이 이의가 없는지 창구에서 확인한다
3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내	상속인 3분의 2 이상	오지 못한 상속인의 사유 증빙과 동의하지 않은 사람 유선 확인

주: 다른 상속인의 이의 여부 확인은 두 구간에 함께 붙는 절차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다고 보면 이 절차를 쓰지 않는다.²¹

자료: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안내」.

1,000만원을 넘으면 간소화 절차가 없다. 상속인 전원의 서류를 모아야 한다. 연락이 끊긴 형제가 한 명 있으면 그 금융회사에서 절차가 멈춘다.

같은 자리를 여러 번 손봤지만 사이는 그대로다

제도를 고친 이력은 짧지 않다. 2022년에는 안심상속 신청 기한이 늘었다. 2024년 7월에는 서류가 표준화되고 한도가 올랐다. 2024년 12월에는 상조상품 확인 범위가 넓어졌다.

고친 곳은 모두 앞 단계이거나 서류다. 조회 결과를 지금 절차로 넘기는 구간은 그대로 남았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 6월 18일 이 구간의 문제를 함께 밝혔다. 상속인이 수십 군데를 몇 번씩 찾아다녀야 하고, 5종의 중복 서류를 금융기관마다 내야 한다는 내용이다.²²

같은 발표에 조회 자체의 빈 곳도 적혔다. 일부 여신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금융투자협회와 신협중앙회, 한국예탁결제원 소속 금융회사는 잔액 없이 계좌가 있는지만 알려 준다.²²

이 구간에서 소송이 생긴다

절차가 멈추면 유족은 법원으로 간다. 최근 3년 동안 4대 시중은행을 상대로 낸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이 556건이다.²³ 지방은행과 저축은행, 상호금융은 이 숫자에 들어 있지 않다.

법원은 공동상속인 한 사람이 자기 몫을 따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다른 상속인의 협의가 없어도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지급이 늦으면 최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 사례가 이어진다고 이 보도는 적었다.²³

다만 생전 증여나 부양, 유류분 문제가 있으면 실제 몫이 달라진다. 연구소는 개별 판결문을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이 내용은 언론이 정리한 취지까지다.

기한은 절차와 상관없이 온다

유족이 서류를 모으는 동안 기한이 흘러간다. 상속을 받을지 말지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에서 3개월 안에 정해야 한다.²⁴

상속세는 고인이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 안에 신고한다.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살면 9개월이다.⁷

이 기한들은 조회가 끝났는지와 상관없이 정해져 있다. 협회 회신이 늦어도 기한은 그대로다.

<표 5> 세 가지 기한이 서로 다른 날부터 세어진다

상속 절차에서 유족이 지켜야 할 기한

무엇을 정하나	기한	언제부터 세나	정한 곳
상속을 받을지 말지 정하기	3개월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	민법
상속세 신고	6개월	사망한 달의 말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	1년	사망한 달의 말일	행정안전부 예규

주: 고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두면 상속세 신고기한은 9개월이다.⁷ 안심상속 기한은 2022년 7월 29일부터 1년이다.¹² 상속을 받을지 정하는 기한은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다.²⁴

자료: 민법 승인·포기 기간 조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신고기한 조항, 행정안전부 발표를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조회를 신청하기 전에 고인 계좌에서 나가는 자동이체를 적어 둔다.**
확인하는 곳 ·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의 자동이체 조회.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린다
- 2 상속인이 몇 명인지 먼저 확정한다. 형제의 연락처를 모으는 일이 서류보다 오래 걸린다.**
확인하는 곳 ·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과 제적등본
- 3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보이면 3개월 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확인하는 곳 · 조회 결과의 금융채무 항목. 정확한 금액은 해당 금융회사에 묻는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한 금융회사에서 받을 돈이 300만원 이내이면 다른 상속인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 상속인 사이에 다툼이 있으면 이 절차를 쓰지 못한다.

4장

누가 얼마나 겪는가

겪는 사람은 얼마나 되고,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갈리나.

같은 금액이라도 상속인이 몇 명인지에 따라 걸리는 시간이 달라진다.

기본증명서

한 사람의 출생과 사망, 개명 기록을 담은 서류다. 고인이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 쓴다. 주민센터와 인터넷등기소에서 땀다.

4분의 3 이상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이용한
사망자 비율
2023년 · 금융감독원

68만 명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누적 이용자
2015년 6월~2020년 7월 · 행정안전부

267,260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신청 건수
2022년 한 해 · 금융감독원

이 절차를 거치는 사람은 계속 늘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2015년 6월에 시작했다. 2017년 8월까지 약 21만 7천 명이 썼다.²⁵

2020년 7월까지의 약 68만 명이 됐다.²⁶ 2023년까지는 약 150만 명이다.³

상속인 금융거래 조치는 시작이 더 이르다. 1999년 1월부터 2023년까지 누적 약 225만 명이다.³ 두 값은 집계를 시작한 해가 16년 넘게 차이 난다. 나란히 놓고 이용률을 견주면 어긋난다.

연간 건수로 보면 흐름이 뚜렷하다. 2018년 신청은 187,491건이라는 보도가 있다.²⁷ 2022년 267,260건, 2023년 283,029건, 2025년 310,738건이다.¹⁹

걸리는 시간은 상속인 수에서 갈린다

같은 금액이라도 걸리는 시간은 같지 않다. 상속인이 한 명이면 300만원 이내를 그 자리에서 받는다.

상속인이 넷이면 사정이 달라진다. 300만원을 넘는 순간 셋 이상의 신청이 필요하다.⁶ 한 명이라도 연락이 닿지 않으면 그 금융회사에서는 돈이 나오지 않는다.

상속인이 어린 자녀뿐이면 절차가 한 단계 늘어난다. 만 14세 미만은 본인이 조회를 신청하지 못한다.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한다.²⁸

신청은 아직 창구에서 받는다

안심상속은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상속인 금융거래 조치는 다르다. 금융감독원 안내문은 창구 방문 접수만 적어 두었다.²⁹

받는 창구는 은행이 대부분이다. 금융감독원과 은행, 농협·수협 단위조합, 우체국에서 받는다. 수출입은행과 외국은행 지점은 빠진다. 보험사는 다섯 곳의 고객센터, 증권사는 한 곳에서만 받는다.²⁹

돈을 옮기는 일에도 시간 제한이 있다.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조회를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열어 둔다. 계좌를 없애거나 잔고를 옮기는 일은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만 된다.³⁰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상속인이 두 명을 넘으면 한 금융회사에서 받을 금액이 300만원을 넘는지 먼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계좌가 있다고 나온 금융회사 고객센터

2 상속인 가운데 만 14세 미만이 있으면 법정대리인 서류를 함께 준비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 안내의 신청 자격란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상속인이 한 사람뿐이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 서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5장

찾아가지 않은 돈은 어디에 있는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돈은 어디에 얼마나 쌓여 있다.

찾아가지 않은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도 이미 공개돼 있다.

휴면예금

오랫동안 거래가 없어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넘긴
예금이다. 원래 주인이
청구하면 돌려받는다.

18.4조원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 총액
2025년 6월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58,506억원

그 가운데 보험금. 전체의 31.7%
2025년 6월말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100만원

조회 화면에서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
잔액 상한
2025년 9월 발표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절차를 끝내지 못한 돈은 사라지지 않는다. 금융회사에 그대로 남는다.

2025년 6월말 기준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은 18조 4,000억원이다.³¹ 예금과
적금, 보험금, 증권, 신탁, 쓰지 않은 카드포인트를 모두 더한 값이다.

이 값에는 살아 있는 사람의 몫도 들어 있다. 상속재산만 잔 값이 아니다.

<표 6> 찾아가지 않은 돈의 열에 일곱은 예·적금과 보험금이다

2025년 6월말 기준 종류별 구성

(단위: 억원, %)

종류	금액	비중	어떤 돈인가
예금과 적금	75,209	40.8	만기가 지났는데 찾지 않은 돈

종류	금액	비중	어떤 돈인가
보험금	58,506	31.7	받을 수 있는데 청구하지 않은 돈
카드포인트	29,060	15.7	쌓아 두고 쓰지 않은 포인트
증권	20,686	11.2	증권사 계좌에 남은 돈과 주식
신탁	1,021	0.6	맡겨 두고 찾지 않은 돈

주: 발표 자료 표에 적힌 자릿수를 그대로 옮겼다. 다섯 항목을 더하면 18조 4,482억원이고 발표 자료는 총액을 18.4조원으로 적었다. 상속재산만 잔 값이 아니다.³¹

자료: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자료(2025년 9월 15일 조건).

이 돈은 줄지 않고 늘었다. 2021년말은 15조 9,000억원이었다. 2022년말 16조 3,000억원, 2023년말 18조원으로 늘었다. 2024년말은 18조 4,000억원이다.³² 3년 사이 2조 5,000억원 늘었다.

돌려받는 길은 이미 열려 있다. 1년 이상 거래가 없고 잔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조회 화면에서 바로 돌려받는다. 예금과 적금,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좌가 대상이다.³³ 본인 계좌로 옮기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두 가지 가운데 고른다.

해마다 조 단위로 돌아가는데도 남는다

찾아주는 일도 계속 있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5년 캠페인으로 1조 6,329억원을 돌려줬다고 밝혔다.³⁴ 카드포인트 6,309억원, 증권 4,037억원, 예·적금 3,388억원, 보험금 2,579억원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2025년 한 해 휴면예금 3,732억원을 돌려줬다. 65만 8,000건이고 건당 평균 56만 7,000원이다. 2024년보다 지급액이 23.7% 많다.³⁵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도 줄고 있다. 2022년말 12조 4,000억원에서 2025년말 10조 3,000억원이 됐다.³⁶ 2025년 한 해 소비자가 찾아간 금액은 3조 2,470억원, 80만 건이다. 건당 평균 404만원이다.

주식도 남아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미수령 주식은 2025년 7월 기준 약 461만 주다. 시가로 약 653억원이다.³⁷ 예탁결제원은 2025년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캠페인을 열었다. 2,135명이 주식 431억원과 대금 2억원을 받아 갔다. 이 캠페인은 참여 상장사를 미리 정해 놓고 한 것이라 앞의 보관액과 모집단이 다르다.

총액은 18조원대에 머문다. 찾아가는 속도만큼 새로 쌓인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1 내 이름으로 된 계좌부터 한 번 훑는다. 잊고 있던 예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정리한다.

확인하는 곳 ·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서민금융진흥원 휴면예금 조회

2 고인 앞으로 나온 보험금이 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즉시 환급은 본인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고인의 계좌를 이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는 이 자료에 적혀 있지 않다.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유족과 금융회사와 당국이 각각 무엇을 할 수 있나.

유족이 줄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제도가 바뀌어야 줄어드는 시간이 있다.

순금융재산

고인이 남긴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다. 상속세를 매길 때 이 값에 공제가 붙는다.

20%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공제율

2026년 8월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억원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한도

2026년 8월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만원

이 금액 이하면 순금융재산 전액을 공제한다

2026년 8월 확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유족이 할 일

연구소가 정리한 순서는 이렇다. 사망신고를 할 때 안심상속을 함께 신청한다. 그다음에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를 넣는다.

조회를 넣기 전에 고인 계좌에서 나가는 자동이체를 확인한다. 조회 신청이 통보되면 그 이체가 멈출 수 있다.⁵ 요양병원비나 공과금이 자동이체로 나가고 있으면 미리 다른 계좌로 옮긴다.

찾은 금융재산은 상속세 신고에 넣는다. 순금융재산이 2,000만원을 넘으면 그 20%와 2,000만원 가운데 큰 금액을 공제한다. 한도는 2억원이다. 2,000만원 이하면 전액을 공제한다.³⁸

금융회사가 할 일

조회 결과에 금액 구간을 함께 적는 방법이 있다. 정확한 잔액을 밝히기 어려우면 구간이라도 알려 주는 방식이다. 유족은 어느 금융회사부터 갈지 정할 수 있다.

거래를 정지할 때 무엇이 함께 멈추는지 알려야 한다. 자동이체가 멈춘다는 사실을 유족이 신청 시점에 알면 준비할 수 있다.

당국이 할 일

조회와 지급 사이를 잇는 절차를 정해야 한다. 지금은 유족이 금융회사를 직접 돌며 그 사이를 메운다.

금액 기준도 다시 봐야 한다. 1인 신청 한도는 2024년 7월 300만원이 됐다.²⁰ 그 위 구간의 3분의 2 요건은 그대로다. 상속인이 여럿이고 사이가 멀면 이 요건에서 절차가 멈춘다.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

연구소는 예측하지 않고 무엇을 어디에서 보면 되는지만 적는다.

첫째, 상속 금융재산을 한 곳에서 처리하는 방안이다.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2027년 초에 상속예금 시범서비스를 여는 것이 목표다. 500만원 상당의 소액 예금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³⁹

둘째, 그 시범서비스에 어느 금융권이 들어가는지다. 발표 시점의 대상은 은행권 중심이다.³⁹ 조회가 되지 않는다고 지목된 일부 여신회사와 손해보험회사가 들어가는지를 보면 된다.

셋째, 조회 결과의 금액 표시를 기관마다 같게 맞추는지다. 지금은 안내마다 다르다.⁴ 이 항목이 맞춰지면 유족이 창구를 도는 횟수가 줄어든 수 있다.

이 장에서 확인할 것

- 1 **오늘 안심상속 신청 기한이 남았는지 센다.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1년이다.**

확인하는 곳 ·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안내 화면

- 2 **상속세 신고기한을 달력에 적는다. 사망한 달의 말일에서 6개월이다.**

확인하는 곳 ·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안내

- 3 **조회 결과에 나온 금융회사를 금액이 큰 순서로 정리해 방문 순서를 정한다.**

확인하는 곳 · 각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잔액을 물어 적어 둔 목록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상속세는 재산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만 낸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공제가 여러 겹으로 붙는다.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한다.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어디에 있는지 한 번에 신청해 알아보는 제도다.

금융감독원이 접수하고 협회와 기관이 나누어 회신한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사망신고를 할 때 금융과 세금, 연금, 토지, 자동차 정보를 함께 신청해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한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본인 명의 계좌를 한 화면에서 보고 정리하는 서비스다. 금융결제원이 운영하고

어카운트인포라고도 부른다.

보관금품

금융회사가 고객 대신 맡아 두고 있는 물건과 증서다. 대여금고에 넣어 둔 것이

여기에 든다.

선물식 할부거래 상품

돈을 먼저 나눠 내고 나중에 서비스를 받는 상품이다. 상조상품이 대표다.

숨은보험금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청구하지 않은 보험금이다.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을 더한 값으로 발표한다.

미수령 주식

주주가 찾아가지 않아 한국예탁결제원이 보관 중인 주식이다. 무상증자나 주식분할로

생긴 뭉치 많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세를 매길 때 순금융재산의 일부를 빼 주는 제도다. 공제율은 20%이고 한도는

2억원이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본

부모와 배우자, 자녀를 모두 담은 증명서다. 사망한 자녀와 이혼한 배우자도 나온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모두 2026년 8월 18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다. 30건 가운데 1차 자료가 16건으로 53.3%다.

1. [1차] 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안내문」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게시). portal.kfb.or.kr (<https://portal.kfb.or.kr/files/fss.pdf>)

2. [1차] 한국신용정보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결과확인 안내. kcredit.or.kr
(<https://kcredit.or.kr:1441/fnncCnsmSprt/heirFnncResultGuide.do>)
3. [1차] 금융투자협회 · 상속인금융거래 안내. kofia.or.kr
(https://www.kofia.or.kr/wpge/m_85/sub040601.do)
4. [1차]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상속인재산조회. fsb.or.kr
(https://www.fsb.or.kr/serheir_0100.act)
5. [1차]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 · 상속 금융재산 인출 관련 안내. fsb.or.kr
(https://www.fsb.or.kr/serheir_0400.act)
6. [1차] 여신금융협회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customer.crefia.or.kr
(<https://customer.crefia.or.kr/>)
7. [1차] 금융결제원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안내. payinfo.or.kr
(<https://payinfo.or.kr/guide/useguideAcntcb.do?menu=4>)
8. [1차] 금융감독원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안내(2024.3.27).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49610>)
9. [1차] 금융감독원 ·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2024.4.23).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0582>)
10. [1차]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 ·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여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가능해진다」(2024.12.30).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61888>)
11. [1차] 행정안전부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온라인 신청 안내(2017.8.31). KDI 경제교육·
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68186)
num=168186)
12. [1차] 행정안전부 ·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 9개 공제회로 확대」(2020.10.29).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06459)
num=206459)
13. [1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자료(2025.9.15 조건).
보험연구원 주간 이슈 전재본. kiri.or.kr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50929/trend20250929_6.pdf)
14. [1차] 금융위원회 · 숨은보험금 12조 1천억원 안내(2024.5.22).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전재본. eiec.kdi.re.kr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1650>)
15. [1차]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항(U-LEX 법률우주 게재). ulex.co.kr
(<https://www.ulex.co.kr/tax/%EC%9E%AC%EC%82%B0%EC%84%B8%EA%B3%BC843-172167>)
16. [1차] 국세청 재산세과-273(2010.5.4) · 상속세 신고기한(U-LEX 법률우주 게재). ulex.co.kr
(<https://ulex.co.kr/tax/%EC%9E%AC%EC%82%B0%EC%84%B8%EA%B3%BC273-172842>)
17. [2차] 머니투데이(2026.6.18) · 상속 금융재산 한 곳 처리 업무협약 보도. mt.co.kr
(<https://www.mt.co.kr/finance/2026/06/18/2026061814381568680>)
18. [2차] 아주경제(2026.6.18) · 같은 업무협약 보도. ajunews.com
(<https://www.ajunews.com/view/20260618161909199>)
19. [2차] 이비엔(2026.1.21) · 서민금융진흥원 2025년 휴면예금 지급 실적 보도. ebn.co.kr
(<https://www.eb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96365>)
20. [2차] 이투데이(2025.8.27) ·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보관 현황 보도. etoday.co.kr
(<https://www.etoday.co.kr/news/view/2500550>)
21. [2차] 서울경제(2025.10.23) · 한국예탁결제원 미수령 주식 캠페인 결과 보도. sedaily.com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AFWDWA2>)

22. [2차] 금융위원회 2025년말 숨은보험금 현황 보도(2026.7.7). fins.co.kr
(<https://www.fin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108>)
23. [2차] 아시아에이(2026.2) · 2025년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결과 보도. asiaa.co.kr
(<https://www.asia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0865>)
24. [2차] 머니투데이(2026.4.27) · 상속예금반환청구 소송 건수와 법원 판단 보도. mt.co.kr
(<https://www.mt.co.kr/finance/2026/04/27/2026042714492080341>)
25. [2차] 파이낸셜뉴스(2024.7.18) · 상속재산 소액 인출 한도 상향 보도. fnnews.com
(<https://www.fnnews.com/news/202407181115298564>)
26. [2차] 매일신문(2026.4.21) · 금융감독원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동향 보도.
imaeil.com (<https://www.imaeil.com/page/view/2026042116402625265>)
27. [2차] 매일경제(2026)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 보도. mk.co.kr
(<https://www.mk.co.kr/article/11991359>)
28. [2차] 머니투데이(2024.6.16) ·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이용 추이 보도. mt.co.kr
(<https://www.mt.co.kr/finance/2024/06/16/2024061414301051610>)
29. [2차] 뉴시스(2022.7.28) ·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기한 연장 보도. newsis.com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728_0001958887)
30. [2차] 대한민국 민법 승인·포기 기간 조문(위키백과 전제). ko.wikipedia.org
(https://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B%AF%BC%EB%B2%95_%EC%A0%9C1019%EC%A1%B0)

각주

1. 금융감독원 「2023년 금융민원 및 상담 동향」이다. 상속인 조회 283,029건, 2022년 267,260건, 5.9% 증가가 이 자료에 있다. 신청 건수 기준이고 사람 수가 아니다. 1차.
2. 금융감독원이 2024년 3월 27일 낸 자료다. 2023년 사망자의 4분의 3 이상이 이용했다는 서술이 있다. 분모는 그해 사망자 수다. 1차.
3.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4년 12월 30일 함께 낸 자료다. 두 값은 집계 시작 시점이 16년 넘게 달라 견주면 어긋난다. 1차.
4. 금융감독원 안내문은 계좌존재 유무와 예금액·채무액을 통지하고 정확한 잔액과 거래내역은 금융회사를 방문해 확인한다고 적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자기 몫을 존재 유무까지로 적어 서로 다르다. 1차.
5. 금융감독원 안내문의 유의사항이다. 어느 금융회사가 실제로 정치하는지는 이 자료에 없다. 1차.
6.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인출 안내다. 한 금융회사에서 지급하는 상속예금 기준이다. 1차.
7.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신고기한 조항이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73이 이 조항을 인용하고 있다. 1차.
8. 한국신용정보원 안내다. 이 몫은 신용보증기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2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 협회의 통보 기간과 별개다. 1차.
9. 금융감독원 「2025년 금융민원 및 금융상담 등 동향」이다. 아시아타임즈와 매일신문, 아이뉴스24, 이비엔 등 네 곳 이상이 같은 값으로 전했다. 2차.
10. 국가데이터처 「2025년 출생·사망통계(잠정)」다. 매일경제와 지디넷, 노컷뉴스 등 네 곳 이상이 같은 값으로 전했다. 같은 발표의 출생아는 25만 4,500명, 자연증가는 -10만 8,900명이다. 두 값으로 되짚은 사망자는 36만 3,400명 안팎이어서 이 값과 어긋나지 않는다. 잠정치다. 2차.
11. 금융감독원 안내문의 조회대상 기관 표다. 열네 곳은 이 표의 줄 수를 센 값이다. 파생.
12. 행정안전부 예규 개정으로 2022년 7월 29일부터 기한이 1년이 됐다. 뉴시스와 강원일보, 이뉴스투데이가 같은 값을 전했다. 금융감독원 안내문에는 6개월로 적은 문장과 1년으로 적은 문장이 함께 있다. 2차.
13. 금융감독원 안내문의 협회별 예상소요기간 표다. 협회가 밝힌 예상치이고 실제 처리 기간의 평균이 아니다. 조화가 되지 않는 금융회사가 있다는 문장이 같은 안내문에 있다. 1차.
14.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상속인재산조회 안내다. 정확한 잔액은 해당 저축은행에 확인해야 한다. 1차.
15. 금융투자협회 상속인금융거래 안내다. 접수일 기준으로 남아 있는 것만 알려 준다는 한정 조건이 붙어 있다. 1차.

16. 여신금융협회 안내다. 조회 범위에 통지일의 채무금액이 든다. 모두 영업일 기준이고, 협회가 네 단계를 더한 값을 전체 기간이라고 밝힌 것은 아니다. 1차.
17. 금융감독원 안내문의 상조 확인 조건이다. 2024년 3월 자료에는 은행에 예치 보전한 업체만 조회 대상이라는 조건도 있었다. 1차.
18. 행정안전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감독원이 2024년 12월 30일 낸 자료다. 세 가지 정보가 맞아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다. 1차.
19.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인출 안내다. 상속인의 처지에 따라 제적등본과 사망확인서를 더 받을 수 있다. 1차.
20. 금융감독원이 9개 금융업 협회와 함께 2024년 7월 17일 낸 개선안이다. 파이낸셜뉴스와 아시아경제, 농민신문이 같은 값을 전했다. 보도는 서류를 표준화했다고만 적었고 세 가지 목록은 저축은행중앙회 안내에서 확인했다. 2차.
21.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포털의 적용 제외 조건이다. 무엇을 다름으로 볼지 정한 수치 기준은 이 자료에 없다. 1차.
22.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밝힌 내용이다. 머니투데이와 아주경제가 같이 전했다. 몇 곳이 조회되지 않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2차.
23. 머니투데이가 2026년 4월 전한 값이다. 이 매체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개별 판결문은 확인하지 못했다. 2차.
24. 대한민국 민법의 승인·포기 기간 조문이다.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다. 조문 전제본으로 확인했다. 2차.
25. 행정안전부가 2017년 8월 31일 낸 자료다. 원문은 약 21만 7천 명이 서비스를 이용했다고만 적었고 사람 기준인지 건 기준인지 밝히지 않았다. 1차.
26. 행정안전부가 2020년 10월 29일 낸 자료다. 같은 자료에서 공제회 네 곳이 2020년 10월 30일부터 조회 대상에 들어갔다. 1차.
27. 머니투데이가 2024년 6월 16일 전한 값이다. 같은 기사가 적은 2023년 건수는 275,739건으로 금융감독원 발표값 283,029건과 다르다. 두 자료의 값을 섞어 증가율을 내지 않았다. 한 곳에서만 확인했다. 2차.
28. 금융감독원 안내문의 신청 자격이다. 만 14세 이상이면 본인이 신청할 수 있다. 1차.
29. 금융감독원 안내문의 접수 방법이다. 안심상속은 시청과 구청, 주민센터에서도 받는다. 1차.
30. 금융결제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안내다. 조회 범위에 은행권과 제2금융권, 증권사, 휴면예금, 보험금이 든다. 1차.
31.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5년 9월 15일 조간으로 낸 캠페인 자료다. 살아 있는 사람의 몫이 함께 들어 있다. 1차.
32. 같은 자료의 연도별 추이다. 각 값은 그해 12월말 기준이고, 본문 앞의 18.4조원은 2025년 6월말 기준이라 시점이 다르다. 3년 사이 증가분은 연구소가 뺀 값이다. 18조 4,000억원 - 15조 9,000억원 = 2조 5,000억원. 1차와 파생.
33. 같은 자료의 즉시 환급 요건이다. 본인 명의 계좌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다. 1차.
3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2026년 2월 밝힌 2025년 캠페인 결과다. 아시아에이와 글로벌이코노믹, 투데이신문 등이 같은 값으로 전했다. 네 항목을 더하면 1조 6,313억원으로 총액과 16억원 차이가 난다. 나머지 항목은 발표에 없다. 2차.
35. 서민금융진흥원이 2026년 1월 21일 밝힌 실적이다. 열 곳 넘는 매체가 같은 값으로 전했다. 실제 지급한 금액이고 보유 잔액이 아니다. 건당 평균은 연구소가 나눈 값이다. 3,732억원 ÷ 65만 8,000건 = 56만 7,000원. 2차와 파생.
36. 금융위원회가 2026년 7월 7일 밝힌 값이다. 조세일보와 뉴스웍스 등이 같은 값으로 전했다.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을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을 더해 발표한다(2024년 5월 22일 자료). 상속 몫만 쟀 값이 아니다. 2차.
37. 한국예탁결제원이 밝힌 값이다. 보관액은 이투데이와 메트로신문, 이데일리가 같은 값으로 전했고 캠페인 결과는 서울경제가 전했다. 캠페인에서 교부한 주식은 약 711만 주여서 보관 주식 수와 견줄 수 있는 값이 아니다. 2차.
38.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항이다. 최대주주와 최대출자자의 주식과 출자지분은 금융재산에서 뺀다. 1차.
39. 금융감독원과 국민권익위원회가 2026년 6월 18일 맺은 업무협약이다. 머니투데이와 아주경제가 같이 전했다. 아직 시행되지 않은 계획이다. 2차.



제목	조회 결과로는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고, 지금은 창구에서 다시 시작된다
시리즈	넥서스 리서치 2026_34 · NEXUS Research 2026_34
발행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 2026년 8월 18일
자료 기준일	2026년 8월 18일
인용 형식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 「조회 결과로는 정확한 잔액을 알 수 없고, 지금은 창구에서 다시 시작된다」, 넥서스 리서치 2026_34, 2026.
수정 이력	없음
누리집	nexusfmi.com

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이나 투자 자문이 아니다. 본문의 견해는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의 것이고, 거래할 금융회사를 정하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 주기 바란다.